

전남도, 정부에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건의

김성환 기후부장관 첫 호남 방문…현안 논의
계통포화 해소·송배전 설비 등 국비지원 요청

전남도가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에너지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정부 협력을 본격화 했다.

전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 발전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김동철 한전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총장대

행 등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이 정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인센티브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특별법에 필수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의 역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구체 과제로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통합특별법에 이양하는 방안

과 함께 해상풍력 향만·배후단지 조성 등 인프라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 직 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계통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폭 확충, 한 전의 허수사업자 정비, 노후 송전선로의 신속한 교체를 통한 계통 여유 확보를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시기의 조기화와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송·배전 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함께 갖춘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부와 한전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발전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전남도

“6월 지방선거 땐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따로 뽑자”

광주교육청, 교육행정통합 놓고 교육가족과 공개 소통
학부모·교직원·시민 200명 참여…우려·불안 목소리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교육 현장에서 이번 선거 만큼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행정통합 논의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교육자치와 현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등부권 교육기록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등부권 교육기록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통합 이후 교원 인사 안정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행정 체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교육행정통합 논의와 교육

청이 각각 운영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등부권 교육기록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 선거를 동일 선상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따랐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까지 함께 통합할 경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통합 여부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의 우려도 커졌다. 한 교사는

“특별법에 인사 안정 방안이 담긴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르면 교원 인사와 학교 운영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가 선

행해야 하며, 당분간은 광주와 전남 교육

청이 각각 운영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

면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育 구성원들이 공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시, 전국 지방소비세 29조 총괄 관리
올해 행안부 납입관리자로 선정…연 100억 이자 수입

광주시가 29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 소비세를 관리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약 29조 원의 전국 지방소비세 징수를 총괄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지방 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받아, 인분 기준에 따라 전국 시

도, 시군구, 교육청에 배분한다.

납입관리자는 분기별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 입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이자 수입이 1년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납입관

리자 선정은 광주시가 인구 대비 지방 소비세 비율, 재정 자주도 등 지표에

서 선정 당위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전국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소

비세를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 조사 연구용역도 추가로 추진한다.

완도군 일수협과 완도소안수협이 연구

비를 공동 부담해 양식호농 시험과 함께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정밀 검증할 예정

이다.

도는 우선 신규 활성처리제 사용을 희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시험어장을 지정

해 약제를 보급하고, 현장 효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협약을 추진해 민간 생산 체계를 구축하

고, 2026년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을 통

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용법 교육

과 설명회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약제

사용 방법을 담은 홍보영상과 안내자료

를 배포해 어업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청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

번 신규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 어업인

이 오랫동안 겪어온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고시 개정

에 맞춰 신속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

을 애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제2 푸바오’서 계속

사육사 14명과 수의사 4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근무한다.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 ‘곰이’와 ‘송강’도 이곳에 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우치동물원은 그동안 동물 보호와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며

“판다 입식이 결정되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운영 전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또한 동물복지, 멸종위기종 보전, 관

광 활성화,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이바오와 러바

오를 한국에 보냈고, 이후 푸바오와 루이

바오, 후이바오가 태어났다. 푸바오는 만

4세가 된 2024년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현

재 국내 판다는 총 4마리다.

김영록 지사, 광양 산불 진화 현장 지휘

민관군 공조체계 밤샘 총력 대응…주불 진화 완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광양 옥곡 산불 현장과 별화지점을 살피 후 민관군

공조로 이뤄진 주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광양시장과 함께 현장을 지휘했다. 이후 인명피해 없이 산불 정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은 21일 오후 3시 31분께 광양 옥곡면 목백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비화로 추정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불청과 소방,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하여 밤샘 진화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임차헬기 4대를 포함해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진화헬기 26대, 진화차량 108대, 공무원과 산불특수진화대 연인원 1천50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주택, 학교 등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잠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면화한 산불 피해 면적 산출과 원인 조사를 하고 2차 피해 방지 위해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 김진기자 lkjin@gwangnam.co.kr

“항철위 ‘여객기참사’ 정보공개 10건 중 2건”

정준호 “사고조사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 회복해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관련 정보를 10건 중 2건밖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철위원장은 참사 이후 외부 소통을 단 1회 진행했다.

22일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사진)이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객기 참사 이후부터 지난 15일까지 유기족, 경찰,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이 관련 정보공개를 10회 요청했지만 항철위는 단 2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항철위원장은 참사 관련 브리핑 등 공식적 외부 소통에 단 1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항철위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외부 소통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이후 유기족은 5회, 경찰 4회, 조종사 노동조합연맹 1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된 자료는 ‘유기족 설명회 자료(11차) (2025년 9월 2일)’ 관련 2회에 그쳤다.

항철위는 의결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보비공개를 결정했는데, 비공개된 내역은 △CVR(음성기록장치), FDR(비행자료기록장치), 교신기록, 항적기록, △엔진분해 정밀 검정조사 결과 보고서 △사고조사 브리핑 자료 및 태국공항 영상자료

이성오 기자 solee235@

△CVR 내용 공개 경위에 대한 질의△ 무안공항 건설공사 및 개량사업 서류 일체 등이다.

항철위원장은 사고 이후 유기족 및 언론 대상 공식 외부 소통도 지난해 7월 19일 무안공항에서 진행됐던 ‘유기족 전체 진료 및 조언’ 행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잠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면화한 산불 피해 면적 산출과 원인 조사를 하고 2차 피해 방지 위해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